

2018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관련 논란에 부쳐*

이건민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1. 여는 말

지난 2월 21일 통계청에서 ‘2018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 결과’를 발표하였다. 통계청장 교체의 배경으로 알려진 2018년 1/4분기와 2/4분기의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때 벌어졌던 논란에 이어, 소득불평등 악화를 시사하는 이번 발표로 인하여 가계동향조사 통계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었다.

이 글에서는 우선 2018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내용과 이를 둘러싼 몇 가지 논란을 간략히 요약한다. 다음으로 여기서 제

* 본고의 일부 내용은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에서 제작한 ‘이러타 107회-1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논란’에서 소개된 바 있음을 밝힌다.

기된 몇 가지 쟁점들을 검토할 것이다. 쟁점 검토 결과, (최)상위 소득자가 누락되고 과소 소득 보고에 취약하다는 가구 조사가 가진 근원적 한계, 계절성을 갖는 분기별 통계로 인한 소득분포 및 소득불평등 추이를 분석하는 것의 부적절성, 2016년, 2017년, 2018년 조사에 걸쳐 이루어진 조사 모집단, 조사 방식, 표본 등의 급격한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적어도 가계동향조사 결과만으로는 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으로 지목된 각 요인들이 소득불평등 확대에 미친 상대적 기여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소득불평등이 어느 정도로 심화되었는지, 심화되기는 한 건지조차 확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논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과 함의를 제공하면서 글을 맺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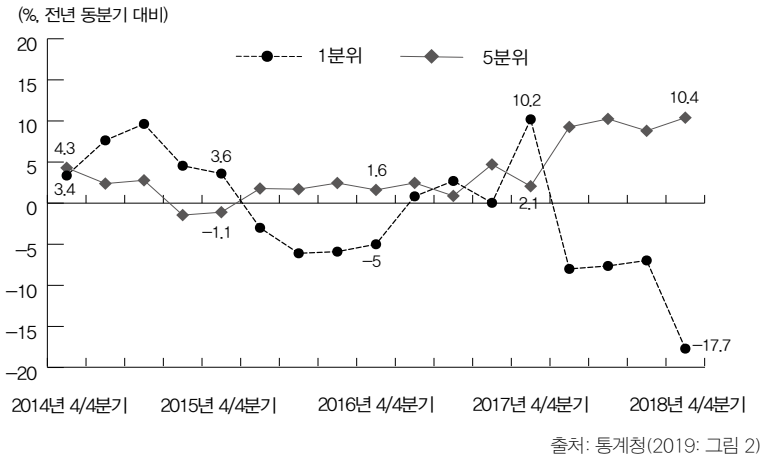
2. 2018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와 이를 둘러싼 논란

2018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통계청, 2019).^{*} 먼저 월평균 소득의 불평등을 살펴보자. 소득 1분위 가구(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 동 분기(2017년 4/4분기) 대비 17.7% 감소(2003년 통계 집계 이후 4분기 기준 역대 최대폭 감소)한 123만8천원에 그친 반면, 소득 5분위 가구(소득 상위 20%에 속하는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 동 분

* 주요 용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비교적 정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소득을 뜻하는 "경상소득"과 일시적이고 예상치 못한 소득을 의미하는 "비경상소득"을 더한 것이다. "경상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공적 이전소득 + 사적 이전소득)의 합이다. "가처분소득"은 경상소득에서 공적 이전지출(경상조세 + 연금 등 사회보험료)을 뺀 것이다. "균등화가처분소득"은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것이다.

기 대비 10.4% 증가한 932만4천원이었다. 1분위 가구의 소득 감소와 5분위 가구의 소득 증가로 인해, 2018년 4/4분기 월평균 소득의 5분위 배율은 7.53으로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1분위 경상소득은 123만6천원으로 전년 동 분기 대비 14.6% 감소한 반면, 5분위 경상소득은 917만7천원으로 전년 동 분기 대비 10.5% 증가하였다. 소득 주도 성장을 표방해 온 정부 입장에서 특히나 난감한 통계는 바로 1분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전년 동 분기 대비 각각 36.8%와 8.6% 감소하였다는 것이다. 전년 동 분기와 비교할 때 5분위는 2018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계속해서 소득 증가를 보인 반면, 1분위는 2018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줄곧 소득 감소를 보일 뿐만 아니라 2018년 4분기의 경우 2018년 1~3분기에 비해 감소율이 훨씬 커진 양상을 나타내었다.

1분위 가구와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 증감률 추이(2014년 4/4분기~2018년 4/4분기)



다음으로 균등화가처분소득의 불평등을 살펴보자. 균등화가처분 소득이 소득보다 한 가구의 실제 구매력을 더 잘 반영한다는 점에서, 월평균 소득의 불평등보다 월평균 균등화가처분소득의 불평등을 파악하는 것이 더 유용할 수 있다.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균등화가처분소득은 전년 동 분기(2017년 4/4분기) 대비 8.1% 감소한 82만3천원에 불과한 반면, 소득 5분위 가구의 월평균 균등화가처분소득은 전년 동 분기 대비 9.1% 증가한 450만6천원이었다. 1분위 가구의 균등화가처분소득 감소와 5분위 가구의 균등화가처분소득 증가로 인해 2018년 4/4분기 월평균 균등화가처분소득의 5분위 배율은 5.47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4.61이었던 전년 동기 대비 0.86배p 상승한 수치이자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4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다. 소득 주도 성장을 표방해 온 정부 입장에서 특별히 난감한 통계는 바로 1분위 근로소득과 사업 소득이 전년 동 분기 대비 각각 19.2%와 20.2% 감소하였다는 것이다.

소득불평등의 악화를 시사하는 2018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둘러싸고 다양한 해석과 주장이 제기되었다. 기획재정부는 소득 분배 지표 악화의 요인으로 1분위 인구의 고령화, 임시·일용직, 1인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한 고용 부진,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2017년 4분기 소득 양상에 따른 기저 효과 등을 들었다(김성모, 2019; 한태희, 2019). 통계청은 한계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고용 상황 악화, 자영업의 부진, 기저 효과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박상영, 2019).

언론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임시·일용직 감소와 자영업 폐쇄의 영향(김홍수, 2019; 박숙현, 2019),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노인 일자리 감소와 미약한 기초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조귀동, 2019), 고령화, 실직 등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만큼 충분치 않은 정

부의 미흡한 재분배 정책(정은주, 2019) 등의 분석을 내놓았다. 더 강한 논조로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소득 주도 성장의 실패(김성모, 2019; 이태훈, 2019; 중앙일보, 2019)를 입증하는 자료로 통계를 평가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중국발 쓰레기 대란으로 인한 폐지 가격 하락이 저소득층의 사업소득 감소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통계청의 표본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분석(최광웅, 2019a; 2019b; 2019c), 소득불평등 심화는 소득 주도 성장 때문이라기보다는 고령화 등의 구조적 요인, 고용 여건 악화라는 정책적 요인, 경기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며 조세와 복지 급여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강화되고 있으므로 가계동향조사 결과는 오히려 소득 주도 성장이 강화될 필요성을 보여 주고 있다는 해석(성홍식, 2019), 고령화와 일자리 감소 추세, 일자리와 성장 간 탈동조화 경향을 인정하고 경제와 일자리 정책보다 사회정책을 우선시하는 새로운 국정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구하는 근본적인 진단(시민건강연구소, 2019) 등이 제시되었다.

정계에서는 2018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최저임금 등의 소득 주도 성장을 추진한 정부 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의 근거로 활용하였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월 1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소득 주도 성장의 실패는 자명하다”라고 주장하는 논거 중 하나로 이 결과를 삼았으며(임주현, 2019), 바른미래당은 한 술 더 떠 통계청이 1인 가구를 제외함으로써 1분위 가구의 소득 감소 폭을 의도적으로 축소, 왜곡하였다고 비판하였다(바른미래당, 2019).

3. 2018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비판적 평가

이제 2018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관련 논란을 하나씩 비판적으로 평가해 보자. 상대적으로 쉬운 것부터 다루어 보겠다.

우선 바른미래당의 주장대로 통계청은 1인 가구를 제외함으로써 1분위 가구의 소득 감소 폭을 의도적으로 축소, 왜곡하였는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가 시작된 1963년 당시에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1인 가구를 조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채 2인 이상 도시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하다가, 2003년 농어를 제외한 전국 2인 이상 가구로 그 대상을 확대하였다. 2017년 기준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28.6%나 차지하는 상황(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18)에서 향후 1인 가구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2018년 4/4분기 결과 발표를 이전까지의 분기와 마찬가지로 농어를 제외한 전국 2인 이상 가구로 일관성을 유지한 것을 1분위 가구의 소득 감소 폭을 의도적으로 축소, 왜곡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논평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논평의 제목 자체가 오류임을 추가로 지적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실령 의도적으로 “1인 가구를 제외”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로 인해 초래되는 것은 “1분위 가구의 소득”의 “축소, 왜곡”이 아니라 “1분위 가구의 소득 감소 폭”의 “축소, 왜곡”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중국발 쓰레기 대란으로 인한 폐지 가격 하락이 저소득층의 사업소득 감소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최광웅(2019a)의 주장을 검토해보자. 길벗(2019)은 우리나라 폐지는 만성적인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 노인들이 수거하는 폐지는 전체의 20% 미만이라

는 점, 폐지 값 하락 효과는 최대로 잡더라도 가구당 월 3,824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들어 중국 발 쓰레기 대란으로 인한 폐지 가격 하락이 저소득층의 사업소득 감소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최광웅(2019a)의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한 바 있다.* 최광웅(2019b; 2019c)은 통계청이 상대표준오차(relative standard error)가 2% 내외라고 밝히고 있음에도 연령대별로 나누어(39세 이하/40대/50대/60세 이상) 살펴보았을 때 2018년 가계동향조사 대상가구의 표본 비율이 2018년 1/4분기부터 2018년 4/4분기에 걸쳐 모두 ‘39세 이하’와 ‘60세 이상’ 가구의 비율 면에서 모집단의 그것과 $\pm 2\%$ 가 넘는 격차를 나타내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를 근거로 통계청의 표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가 제시한 논거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상대표준오차는 추정하는 변수의 표준오차를 추정치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을 의미하지 표본 비율과 모집단 비율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통계청(2019) 보도 자료를 살펴 보더라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표 1〉 가구당 월평균 소득’ (2쪽)에서는 ‘재산소득’과 ‘비경상소득’이, ‘〈표 3〉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 지출’ (4쪽)에서는 ‘비경상조세’가 각각 “상대표준오차(RSE)가 높아 이용 시 유의” 하라고 별표로 표시되어 있으며, ‘이용 시 유의’의 의미를 “재산소득 등 발생 빈도가 낮아서 표본규모가 크지 않고 공표주기가

* 다만 1분위 근로자 외 가구의 사업소득과 폐골판지 가격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길벗(2019)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가 제시한 표 1분위 근로자 외 가구의 사업소득과 폐지 가격의 상관성²을 기초로 필자가 2016년 1/4분기에서 2018년 4/4분기에 걸친 사업소득과 폐골판지 가격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두 변수 간 상관계수는 0.7187로 매우 높았다. 사업소득을 종속 변수, 폐골판지 가격을 독립변수로 한 단순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의 회귀계수는 1,108.923으로서, 1%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3.27$, P - $value=0.008$). 참고로 결정계수 R-squared는 0.5165, 수정결정계수 adjusted R-squared는 0.4681이었다.

〈표〉 균등화가처분소득의 5분위 배율(2017년 1/4분기~2018년 4/4분기)

	2017년 1/4분기	2017년 2/4분기	2017년 3/4분기	2017년 4/4분기	2018년 1/4분기	2018년 2/4분기	2018년 3/4분기	2018년 4/4분기
시장소득 (A)	7.73	6.68	7.32	6.54	8.96	7.99	8.80	9.32
가처분소득 (B)	5.35	4.73	5.18	4.61	5.95	5.23	5.52	5.47
개선 효과 (A-B)	2.38	1.95	2.14	1.93	3.01	2.76	3.28	3.85

출처: 통계청 제공. 장서우(2019)에서 인용

분기인 통계자료에서는 추정치의 정확도가 낮을 수 있으므로 자료 이용 시 유의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22쪽). 물론 통계청의 표본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이는 최광웅(2019b; 2019c)의 방식과는 다른 논점과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설명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득불평등 확대를 시사하는 2018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의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 2018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둘러싸고 1분위 소득 감소의 원인으로 지목된 남은 후보로는 고령화,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소득 주도 성장으로 인한) 임시·일용직, 1인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한 고용 상황 악화, 시장소득불평등을 반전시키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조세-급여 체계(〈표〉 참조),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2017년 4분기 소득 양상에 따른 기저 효과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점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첫째, 2018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만으로는 위의 후보들이 소득불평등 확대에 미친 상대적 기여도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들다는 점이다. 통계청에서도 밝히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도 지적한 바와 같이 계절성 seasonality을 갖는 분기별 통계를 이용하여 소득분포 및 소득불평등 추

이를 분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성홍식, 2019; 조혜정, 2018; 통계청, 2019). 또한 가계동향조사를 통해서도 최저임금에 영향을 많이 받는 집단과 적게 받는 집단을 구분하기 어렵거나 거의 구분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가계동향조사는 최저임금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통계가 아니다(조혜정, 2018).

둘째, 2016년, 2017년, 2018년 조사에 걸친 조사 모집단, 조사 방식, 표본 등의 급변은 각 요인이 소득불평등 확대에 미친 상대적 기여도 파악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소득불평등이 어느 정도로 심화되었는지, 심화되기는 한 건지조차 확인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이다. 가계동향조사를 비롯한 가구 조사는 (최)상위 소득자의 누락 *undercoverage*과 과소 소득 보고 *underreporting* 문제에 취약하다(김낙년, 김종일, 2013; 알바레도, 샹셀, 피케티, 사에즈, 주크먼, 2018; 앳킨슨, 2015; 이건민, 2017). 이러한 비판에 직면하여, 통계청은 2016년 기준소득부터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공식 소득분배 지표로 파악하는 대신 2018년부터는 가계동향조사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었다(조혜정, 2018). 하지만 정부는 무리하게도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소득 주도 성장의 정책 효과를 분기별로 확인하기를 원하였고, 통계청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은 가계동향조사를 위한 예산 28억5,300만원을 2018년 예산에 포함시켜 버렸다(정현수, 2018). 원래 가계동향조사는 기존 조사와의 '연속성' 유지(표본을 추가할 때 기존 표본의 특성을 연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를 충족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모집단의 특성 또한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표본을 추가할 때, 모집단의 횡단면적 특성을 정확히 대표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2016년까지는 한 번 조사 대상 표본 가구가

되면 3년간 지속해서 조사하며, 표본은 매월 1/36, 매년 1/3씩 교체해 왔다. 그러나 가계동향조사를 폐지하기로 했다가 되살리는 일련의 과정으로 인해, 2016년, 2017년, 2018년 조사에 걸쳐 조사 모집단, 조사 방식, 표본 등의 급격한 변화가 초래된 것이다(홍민기, 2018).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홍민기, 2018). 먼저 조사 모집단의 변화를 보면, 2016년 조사에서의 표본 설계와 2017년 조사에서의 표본 설계는 '2010년 인구총조사 + 아파트 가구'를 조사 모집단으로 한 반면, 2018년 조사에서의 표본 설계는 '2015년 인구총조사'를 조사 모집단으로 삼았다. 다음으로 조사 방식상의 변화를 보자면, 2016년까지 조사에서는 '가계부 기장 36개월' 방식으로 조사하였으나, 2017년과 2018년 조사에서는 '가계부 1개월 + 조사표 응답'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이어서 1인 가구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 표본의 변화를 살펴보자. 2016년 표본 6,956개 중에 2,621개 표본이 2017년에 유지되었고, 2017년에 1,524개가 추가되어 총 4,145개 표본이 되었다. 2017년 표본 가운데 2,703개가 2018년에 유지되었고, 2018년에 3,907개가 추가되어 총 6,610개 표본이 되었다. 관건은 2018년에 기존 표본 2,703개보다 더 큰 수의 신규 표본 3,907개가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만약 신규 표본이 기존 표본과 체계적인 차이를 보인다면 기존 조사와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요건을 지키기 어렵게 된다. 이러한 경우 그 이전 자료와 2018년 자료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할 수 있는데, 실제로 기존 표본과 신규 표본 간 체계적인 차이가 관찰되었다(강신욱, 2018; 홍민기, 2018). 신규 표본에 저소득층이 많이 포함된 것 자체도 문제이지만, 신규 표본에 들어간 저소득층

중 1인 가구와 노인 가구의 비중이 특히나 크다는 점이 문제의 심각성을 키운 것으로 평가된다(강신욱, 2018; 홍민기, 2018).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1인 가구를 포함한 2018년 신규 표본의 특징을 보면,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에서만 신규 표본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홍민기, 2018). 1분위에서 신규 표본의 비중은 71.8%로 다른 분위에서의 비중(평균 59.2%)에 비해 매우 높았던 것이다. 2018년 신규 표본에서 2인 가구 이상으로 표본을 한정하더라도 1분위에서 신규 표본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1분위 1~2인 가구의 비중이 90%를 초과하게 되었으며, 노인 1인 가구 또는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의 비중이 증가하여 1분위 내 이 유형의 가구 비중은 약 2/3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강신욱, 2018).

따라서 (최)상위 소득자의 누락과 과소 소득 보고에 취약하다는 가구 조사가 가진 근원적 한계, 계절성을 갖는 분기별 통계로 소득분포 및 소득불평등 추이를 분석하는 것의 부적절성, 2016년, 2017년, 2018년 조사에 걸쳐 이루어진 조사 모집단, 조사 방식, 표본 등의 급격한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 현재로서는 위에서 지목된 요인들(고령화, 임시·일용직, 1인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한 고용 상황 악화, 시장소득불평등을 반전시키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조세-급여 체계,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2017년 4분기 소득 양상에 따른 기저 효과 등)이 소득불평등 확대에 미친 상대적 기여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소득불평등이 어느 정도로 심화되었는지, 심화되고는 한 건지조차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앞서 지적

* 누군가는 모집단의 횡단면적 특성을 더 잘 파악하기 위해 2010년 인구총조사에서 2015년 인구총조사로 모집단을 변경함으로써 해당 기간에 진행된 우리 사회의 불평등 및 고령화 심화가 더 잘 반영된 것으로 해석하고 싶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것이 분기별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 나

한 바와 같이, 가계동향조사 결과만으로 최저임금 등 특정 정책의 효과를 식별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4. 맺는 말

지금까지 '2018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 발표 내용과 이를 둘러싼 몇 가지 논란을 간략히 요약하고, 이와 관련하여 제기된 몇 가지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최)상위 소득자의 누락과 과소 소득 보고에 취약하다는 가구 조사가 가진 근원적 한계, 계절성을 갖는 분기별 통계로 소득분포 및 소득불평등 추이를 분석하는 것의 부적절성, 2016년, 2017년, 2018년 조사에 걸쳐 이루어진 조사 모집단, 조사 방식, 표본 등의 급격한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적어도 가계동향조사 결과만으로는 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으로 지목된 각 요인들(고령화, 임시·일용직, 1인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한 고용 상황 악화, 시장소득불평등을 반전시키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조세-급여 체계,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2017년 4분기 소득 양상에 따

탄만 불평등 및 고령화 심화 정도 중에서 얼마만큼을 설명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며, 2016년, 2017년, 2018년 조사에 걸친 조사 모집단, 조사 방식, 표본 등의 급변은 이의 파악을 훨씬 더 어렵게 한다.

* 혹자는 1분위 가구 중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 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 4/4분기에 각각 42.6%와 57.4%에서, 2018년 4/4분기 각각 28.5%와 71.5%로 변화하였다는 것(통계청, 2019: 14), 그리고 1분위 가구의 평균 취업 가구원 수가 2017년 4/4분기 0.81명에서 2018년 4/4분기 0.64명으로 급감한 것(통계청, 2019: 11)을 두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저소득층 내에서의 실직의 영향으로 해석하고 싶을지 모르겠다. 실제로 (우파) 경제학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는 듯하다(대표적인 예로, 한재준, 2019). 하지만 1분위 가구 중 근로자 가구 비중의 급감은 2017년 4/4분기와 2018년 1/4분기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통계청, 2019: 14; 42.6%에서 29.9%로 12.7%p 감소; 참고로 2018년 2/4분기에는 32.6%, 3/4분기에는 31.7%를 기록), 해당 기간이 조사 모집단, 조사 방식, 표본 등의 급격한 변화가 수반된 시기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해석은 무리가 따른다고 하겠다.

른 기저 효과 등)이 소득불평등 확대에 미친 상대적 기여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소득불평등이 어느 정도로 심화되었는지, 심화되기는 한 건지조차 확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이제 이번 논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과 함의를 도출해 보자.

첫째, 통계를 이용해 정치적 효과를 노리고자 하거나 통계 결과를 시기에 따라 일관성 없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점이다. 애초에 없애고자 결정했던 가계동향조사를 분기별로 정책 효과를 보겠다는 무리한 기획으로 이를 다시 살리는 과정에서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를 둘러싼 논란의 첫 빌미가 형성된 것이다(고재석, 2018). 통계 결과에 대한 일관성 없는 해석도 어렵지 않게 발견되는데, 특히 보수 언론은 전년 동 분기 대비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저소득층의 소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통계 발표에 대해서는 가구 조사의 근본적 한계, 조사 방식의 변화, 계절성의 반영, 기저 효과의 영향 등을 지적하는 데 열을 올린 반면(대표적인 예로, 오형주, 2018), 전년 동 분기 대비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저소득층의 소득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난 통계 발표에 대해서는 위에서 지적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최저임금 등 소득 주도 성장의 부정적 효과를 반영한 것으로 일면적으로 해석하는 비일관성을 드러내었다(단적인 예로, 김성모, 2019; 김홍수, 2019; 이태훈, 2019; 중앙일보, 2019).

둘째, 특정 정책의 영향 또는 소득분포의 변화를 짧은 기간 내에 식별하고자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졌는가)의 문제와는 별개로)* 최저임금을 비롯한 소득 주도 성장의 ‘긍정적’ 효과를 단기간에 파악하고자 하는 조급증은 가계동향조사, 고용 통계 등 각종 통계 발표 때마다 보수적인 언론과 학자를 중심으로 한 보수 세력으로부터의 거센 역풍에 더욱 취약하게 하고 증장기적으로 일관된 정책의 집행과 효과 분석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데 분명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데이터의 투명한 공개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조사 설계 및 방식 변화로 인한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실은 ‘기준이 되는 소득분포’가 없기 때문에 분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홍민기, 2018). 이로 인해 통계청과 국세청에 통계 원자료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물론 데이터의 투명한 공개만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빅)데이터의 소유, 관리, 이용, (빅)데이터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의 공유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진보적 개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정치경제연구소 대안, 2018e; 2018f; 2018g; 2019).

끝으로 이번 논란을 둘러싼 정부의 인식과 대응이 크게 우려되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2018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당일,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최근 분배 여건의 어려움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소득분배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일자리 창출이 뒷받

* ‘2020년 시급 1만원’이라는 최저임금 인상 공약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방준호, 2017)과 최저임금 산입 범위의 확대(이지혜, 2018)라는 일련의 ‘기형적인’ 형태를 낳았으며, 결국 ‘속도 조절론’ 압박에 따라 공약을 사실상 폐기하게 되었다(김민재, 2018). 현재는 탄력근로제 확대까지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추진은 다양한 우려곡절을 거치는 과정에서 뚜렷한 정책 후퇴 기조를 보여 주는 형국이다. 최저임금제의 의미와 근본적인 한계,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의 의미와 영향에 대한 비판적인 고찰로는 정치경제연구소 대안(2018a; 2018b; 2018c; 2018d)을 참고하라.

침 때야 하는 만큼 규제 개혁, 상생형 일자리 확산, 산업 혁신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서연, 2019). 민간 일자리 창출을 1차적인 해법으로 보고 규제 개혁과 상생형 일자리 확산 등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점, 재벌 개혁을 비롯한 사회경제개혁 조치는 시작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전강수, 2018; 연합뉴스, 2019), 향후 소득불평등을 한층 심화시키면서 이와 동시에 사회 전체적으로 일자리를 줄일 것으로 예상되는 데이터·플랫폼 산업 부문에 투자·지원하면서도 공유 지분권의 설정을 통한 기본소득 지급 방안 등의 소득 불평등 개선책(금민, 2018)에 대한 고민이 여전히 전무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극적인 정책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사회보장제도에서의 일부 개혁 조치 추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현 정부 하에서 소득불평등의 눈에 띄는 개선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 문헌

강신욱 (2018). 「가구소득불평등의 동향과 특징」, 소득분배의 현황과 정책대응 토론회(주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관: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년 8월 16일, 중소기업중앙회 2층 릴리홀. (<https://www.kihasa.re.kr/web/news/report/view.do?menuId=20&tid=51&bid=79&ano=10731>.)

고재석 (2018). <[인터뷰] 소득통계 권위자 김낙년 동국대 교수>, 《동아닷컴》 9월 25일. <http://news.donga.com/3/all/20180925/92143972/1>. (2019년 3월 14일 최종 접속)

금민 (2018). <[오피니언] 데이터 기술 R&D PIE는 ‘공유지분권

에 입각한 사회배당'과 결합되어야 한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웹 사이트 9월 18일. (http://basicincomekorea.org/opinion_20180918-min-geum.) (2019년 3월 19일 최종 접속)

길벗 (2019). <저소득층 몰락, 폐지 닷 말고 정책 따져야>, 《제3의 길》 3월 10일. (<http://road3.kr/?p=14012&cat=118>.) (2019년 3월 14일 최종 접속)

김낙년, 김종일 (2013). 「한국 소득분배 지표의 재검토」, 『한국경제의 분석』 19 (2).

김민재 (2018). <속도조절론에 '우향우'... 최저임금 공약 사실상 폐기>, 《노컷뉴스》 7월 16일. (<https://www.nocutnews.co.kr/news/5000762>.) (2019년 3월 19일 최종 접속)

김서연 (2019). 「[더 커진 소득격차] 123만8000원 Vs. 932만4000원. 가계 소득 격차 통계 작성 이래 15년 만에 '최악」, 『파이낸셜뉴스』 2월 21일. (<http://www.fnnews.com/news/201902211102275068>.) (2019년 3월 14일 최종 접속)

김성모 (2019). 「최저임금 과속 1년 새 ... 저소득층 '무직 가구' 43%→55%」, 『조선일보』 2월 22일.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22/2019022200274.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2019년 3월 14일 최종 접속)

김홍수 (2019). 「123만원 vs 932만원... 소득격차 역대 '최악': 소득 하위 1분위, 고용참변 이어 소득참변 폭탄」, 『시장경제』 2월 21일.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19>.) (2019년 3월 14일 최종 접속)

바른미래당 (2019). 「[논평]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1인 가구를 제

외하여 1분위 가구의 소득을 축소·왜곡하였다», 《네이버뉴스》 2월 28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517&aid=0000006474>.) (2019년 3월 14일 최종 접속)

박상영 (2019). 「2018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월 21일. (<http://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56318460&pageIndex=1&srchType=&startDate=2008-02-29&endDate=2019-02-21&srchWord=>.) (2019년 3월 13일 최종 접속)

박숙현 (2019). 「임시직·자영업 폭망에 작년 4분기 소득양극화 역대 최악», 『매일일보』 2월 21일.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498131>.) (2019년 3월 14일 최종 접속)

방준호 (2017). 「최저임금 ‘1인당 13만원’ 현금보조…2019년 이후 간접지원 바뀔 듯», 『한겨레』 12월 4일.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22026.html.) (2019년 3월 19일 최종 접속)

성홍식 (2019). <[내일의 눈] ‘소주성’(소득주도성장) 강화 필요성 보여준 가계동향통계>.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04934.) (2019년 3월 14일 최종 접속)

시민건강연구소 (2019). <‘역진 경제’ 시대, 문제는 일자리가 아니다: [서리풀 논평] 소득 참사, 진짜 의미>, 《프레시안》 2월 25일.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30126&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2019년 3월 14일 최종 접속)

알바레도, 파콘도, 루카 샹셀, 토마 피케티, 이매뉴얼 사에즈, 게이브리엘 주크먼 (2018). 장경덕 역, 『세계불평등보고서 2018』, 글항아리.

엡킨슨, 앤서니 B, (2015). 장경덕 역, 『불평등을 넘어: 정의를 위

해 무엇을 할 것인가』, 글항아리.

연합뉴스 (2019). <[한국경제 길을 묻다] “정부, 재벌개혁 약속 지키지 않아”〉, 《연합뉴스》 3월 17일. (<https://www.yna.co.kr/view/AKR20190314161800003?input=1195m>.) (2019년 3월 19일 최종 접속)

오형주 (2018). 「가계소득 9분기 만에 1.6% 증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 효과라는데…」, 『한국경제』 2월 22일.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22295811>.) (2019년 3월 19일 최종 접속)

이건민 (2017).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 『녹색전환연구소 전환소식』 5월 8일. (http://igt.or.kr/index.php?document_srl=56704&mid=column.) (2019년 3월 13일 최종 접속)

이지혜 (2018). 「최저임금 산입범위, 상여금 + 복리후생비까지 전면 확대키로」, 『한겨레』 5월 25일.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46216.html>.) (2019년 3월 19일 최종 접속)

이태훈 (2019). 「최저임금 올렸더니 빈곤층 소득 37% 감소 … “소주성, 이래도 고집할 건가”」, 『한국경제』 2월 21일.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22145651>.) (2019년 3월 14일 최종 접속)

임주현 (2019). <[팩트체크K] 나경원 국회연설 ‘경제이슈 3가지 주장’ 따져보니〉, 《KBS NEWS》 3월 13일.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56799&ref=A>.) (2019년 3월 14일 최종 접속)

장서우 (2019). <재분배 효과는 커졌지만…양극화 수준, 역대 최악(종합)〉, 《뉴시스》 2월 21일.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221_0000565939&cID=10401&pID=10400.) (2019년 3월 14일 최종 접속)

전강수 (2018).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운용, 방향 선회인가 속도

조절인가?”], 『노동사회』 202호.

정은주 (2019). 「하위 20% 가구소득 18% 감소…소득격차 역대 최악」, 『한겨레』 2월 21일.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83032.html.) (2019년 3월 14일 최종 접속)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2018a). <이러타 83회 1부 - 최저임금, 정체가 무엇인가?>. (<https://alternative.house/podcast-83-1>.) (2019년 3월 19일 최종 접속)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2018b). <이러타 83회 2부 - 최저임금, 정체가 무엇인가?>. (<https://alternative.house/podcast-83-2>.) (2019년 3월 19일 최종 접속)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2018c). <이러타 96회 1부. 줬다 뺐는 최저임금 -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의 의미와 파장>. (<https://alternative.house/podcast-96-1>.) (2019년 3월 19일 최종 접속)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2018d). <이러타 96회 2부. 줬다 뺐는 최저임금 -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의 의미와 파장>. (<https://alternative.house/podcast-96-2>.) (2019년 3월 19일 최종 접속)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2018e). <이러타 99회. 우리 모두의 도시. 공유도시와 도시공유>. (<https://alternative.house/podcast-99>.) (2019년 3월 19일 최종 접속)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2018f). <이러타 106회-1부. 데이터 중심 ‘혁신성장’의 길>. (<https://alternative.house/podcast-106>.) (2019년 3월 19일 최종 접속)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2018g). <이러타 106회-2부. 플랫폼 자본주의와 국가 공유 지분권>. (<https://alternative.house/podcast-106>.) (2019

년 3월 19일 최종 접속)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2019). <이러타 121회 - 플랫폼 자본주의와 데이터 소유권>. (<https://alternative.house/podcast-121>. (2019년 3월 19일 최종 접속)

정현수(2018). 「[Wide & deep] 올해 없애려던 ‘가계동향조사’ 되살리면서 탈났다: 논란 계속... 무엇이 문제인가», 『국민일보』 9월 3일.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01975&code=11151100&sid1=all>.) (2019년 3월 19일 최종 접속)

조귀동 (2019). <노인빈곤 경시가 양극화 참사 불렀다>, 《조선비즈》 2월 27일.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26/2019022602653.html.) (2019년 3월 14일 최종 접속)

조혜정 (2018). 「최저임금 효과 측정할 통계 절실 ... 예산 들여 체계 갖춰야», 『한겨레』 8월 8일.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56785.html.) (2019년 3월 14일 최종 접속)

중앙일보 (2019). 「[사실] 빈곤층 소득 18%나 감소...소득주도 성장 역효과 아닌가», 2월 22일. (<https://news.joins.com/article/23392543>.) (2019년 3월 14일 최종 접속)

최광웅 (2019a). <[팩트체크] 소득분배악화, 최저임금 아닌 폐지가격 하락 때문: [최광웅의 데이터 경제] ① 가계동향조사에 대한 언론의 엉터리 해석>, 《뉴스톱》 2월 26일.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0>.) (2019년 3월 14일 최종 접속)

최광웅 (2019b). <통계청 표본, 39세이하 ‘과소대표’ 60세이상 ‘과다대표’ 됐다: [최광웅의 데이터 경제] ② 허용오차 2% 넘어서는 엉터리 표본>, 《뉴스톱》 3월 11일.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

html?idxno=1357.) (2019년 3월 14일 최종 접속)

최광웅 (2019c). <소득분배 악화 주범은 엉터리 통계청이다: [최광웅의 데이터 경제] ③ 중앙일보 보도에 대한 반론>, 《뉴스톱》 3월 11일.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360>.) (2019년 3월 14일 최종 접속)

통계청 (2019). 「2018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 2월 21일.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73282.) (2019년 3월 13일 최종 접속)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18). <1인가구비율(시도/시/군/구)>. (<http://kosis.kr/index/index.do>.) [자료갱신일: 2018년 9월 14일] (2019년 3월 14일 최종 접속)

한재준 (2019). <‘빛바랜 소득주도성장’…고용참사 여파에 소득분배 ‘역대최악’>, 《뉴스1》 2월 21일. (<https://www.msn.com/ko-kr/money/topstories/빛바랜-소득주도성장...고용참사-여파에-소득분배-역대최악/ar-BBTsisS>.) (2019년 3월 19일 최종 접속)

한태희 (2019). <‘고용참사’가 부른 양극화…1·5분위 가구 소득격차 2003년 이후 최악>, 《뉴스핌》 2월 21일.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0221000366>.) (2019년 3월 14일 최종 접속)

홍민기 (2018). 「가계동향조사 2018년 자료의 특성, 소득분배의 현황과 정책대응 토론회(주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관: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년 8월 16일 15~18시, 중소기업중앙회 2층 릴리홀. (<https://www.kihasa.re.kr/web/news/report/view.do?menuId=20&tid=51&bid=79&ano=10731>.)

시대